



제5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제3절 인도적 지원

제4절 새터민 정착지원

제5절 북한인권문제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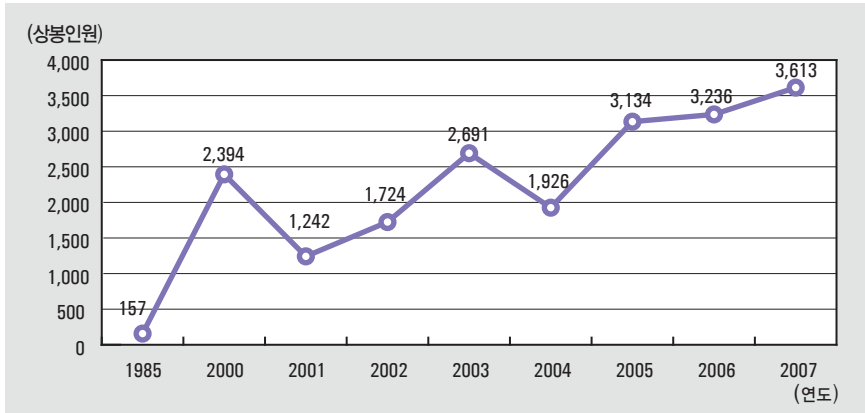
남북 인도분야 협력

남북간 인도분야는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북한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대북지원, 새터민 정착지원 및 북한주민의 인권 등 다양한 현안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분야 협력은 1970년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에서 출발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인도분야 협력이 확대되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7차례의 화상상봉, 1차례의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류과정에서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은 남북한 총 48,338명이며, 서신교환도 1차례의 시범실시 600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79건 등 총 679건이 성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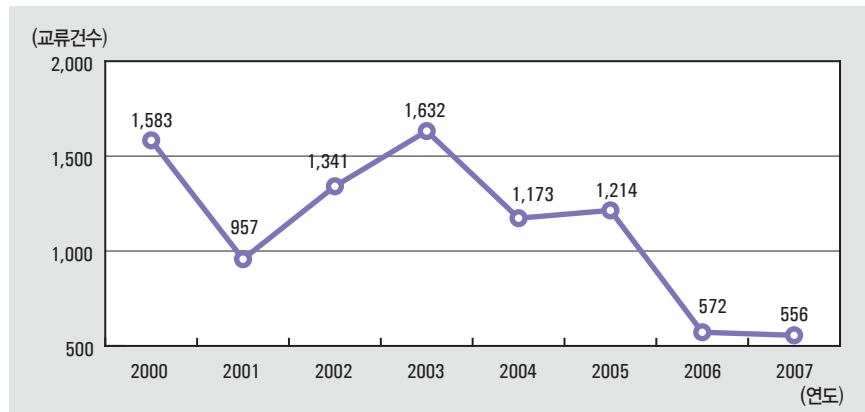
정부는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1990년 처음 시작되어 2007년 까지 생사확인 3,756건, 서신교환 11,093건, 제3국을 통한 상봉 1,638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당국차원의 상봉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현황



※ '05년부터는 화상상봉 인원을 포함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추이



※ 제3국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을 포함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여 2007년 12월 면회사무소가 준공되었으며 2008년 7월에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될 예정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면회소의 완공을 계기로 '상시상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11월 제9차 적십자회담에서 상봉행사의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반면, 국군포로와 남북자문제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남북 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모든 기회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상봉 현황 (2~16차 이산가족 상봉시)

구 분	생사확인 의뢰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 봉	상봉 가족수
국군포로	101	13	12	76	11	20가족(78명)
전시납북자	16		2	14		2가족(7명)
전후납북자	97	15	19	63	14	16가족(73명)
합 계	214	28	33	153	25	38가족(158명)

를 활용하여 대북협상의 의제로 제기하였다. 남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정부는 남북회담과 병행하여 2000년 11월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부터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부분적으로 포함시켜 생사확인 및 상봉을 추진하여 왔다.

2000년부터 2007년 10월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 우리측은 국군포로·납북자 214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북한에 의뢰하여 38가족 158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이 상봉하였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10.28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및 「납북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였다. 2008년에는 납북자 가족들의 신청에 따라 본격적 피해 위로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 정부의 부담능력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00년 이후 매년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정부 유관부처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합동으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의 상호보완적 구도하에 북한의 자립·자활을 돕는 개발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0년대 중반, 북한 내 대량 아사자 문제를 해결하는

대북지원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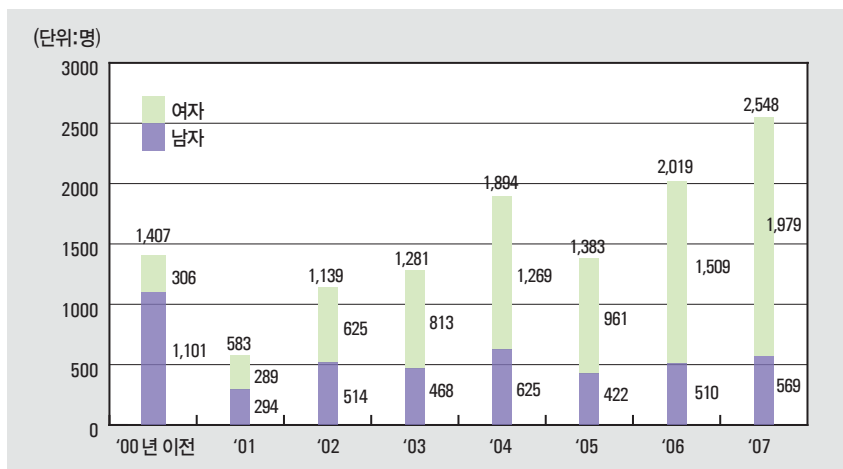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 계
무상	정부	1,854	24	240	154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159	13,929
	민 간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7,171
	계	1,856	36	422	429	562	1,365	1,757	1,716	1,863	2,871	2,139	3,005	21,100
식량차관						1,057		1,510	1,510	1,359	1,787		1,649	8,872
총 계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3,005	4,728	29,972

*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매칭지원)분은 정부지원에 포함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국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급·만성 영양장애나 저 체중 현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모니터링 확대 등 분 배투명성을 국제기준으로 제고시키는 노력도 계속해 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 칙 하에, 국내법령과 UN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하고 국 내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체류국가에서의 체류여건이 개선되고, 본인의 의사 에 반한 강제북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터민 입국 추이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입국 새터민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월 1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총 2,548명이 입국하여 역대 최다 입국을 기록하였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7년에는 약 78%에 이르고 있다. 국내 입국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들의 자립·자활의지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1절 남북이산가족

2007년에는 남북간 합의에 따른 당국차원의 이산가족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 모두 증가하였다. 2007년 중 이산가족교류는 2006년 11,550명 대비 10% 증가한 12,734명으로 증가하였고, 민간차원에서도 2006년 572건, 623명 대비 2007년 556건, 671명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8%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상시상봉’에 합의하고 제9차 적십자회담(’07.11.28~30, 금강산)을 통해 연간 상봉규모 남북 각 400명, 분기별 화상상봉 각 40가족 등을 확정함으로써 정례적·상시적인 상봉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5년 만인 12월 7일 남북이 참석한 가운데 면회사무소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8년 7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1998년 이산가족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료를 통합 관리해 왔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산가족 신청현황 및 교류현황 통계 산출, 이산가족대상 대민서비스 제공,

남북 이산가족 교류현황

(단위: 건/(명))

연도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민 간 차 원	생사 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89	3,756
	서신 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11,093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383)	165 (471)	203 (592)	280 (662)	187 (465)	94 (256)	50 (86)	53 (164)	1,638 (3,079)
	방북 상봉										1 (2)	5 (18)	4 (9)	5 (22)	5 (24)	3 (15)	1 (5)	1 (5)	4 (19)	1 (5)	30 (124)
당 국 차 원	생사 확인	65 (157)											792 (7,543)	744 (2,670)	261 (1,635)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6,579 (48,338)
	서신 교환												39 (39)	623 (623)	9 (9)	8 (8)	-	-	-	-	679 (679)
	방남 상봉	30 (81)											201 (1,720)	100 (899)	-	-	-	-	-	-	331 (2,700)
	방북 상봉	35 (76)											202 (674)	100 (343)	398 (1,724)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3,112 (13,669)
	화상 상봉																	199 (1,323)	80 (553)	278 (1,872)	557 (3,748)

※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등록현황(2007.12.31 현재) : 126,787명 등록 (사망 33,300명 / 생존 93,487명)

이산가족 관련 정책수립 지원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2007년에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재구축, 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접속하게 만드는 한편, 신청자료의 갱신사업을 진행하였다.

통일부는 2007년 1월 16일 대북지원, 이산가족 등 남북간 인도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대한적십자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통일부는 이산가족상봉행사 진행,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 등 이산가족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북한주민 사체 처리 등 남북 사이에 추진되는 인도적 사업의 집행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1. 이산가족 상봉행사

2007년 3월에 개최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07년 5월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측 98명과 동반가족 48명이 재북가족 226명을 상봉하고,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북한측 100명이 재남가족 438명을 상봉함으로써 전체 상봉자는 총 910명이었다.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7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되었다. 200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측 가족 396명이 재북가족 97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북한가족 216명이 재남가족 122명을 상봉함으로써 전체 상봉자는 831명이었다.

제16차 상봉행사부터 90대 이상 고령자 및 직계가족의 상봉물 제고를 위해 상봉후보자 선정시 인선기준을 조정하여, 90대 이상 고령자 및 직계가족의 선정비율을 확대·반영하였다. 그러나 제16차 상봉은 건강 이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상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남한 7명, 북한 3명)하여 당초 예정했던 상봉 인원수(남북 각기 100명)를 채우지 못하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007년도 상봉 현황

구분	15차 상봉	16차 상봉
일정	5.9~5.14	10.17~10.22
상봉 횟수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작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작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참관	삼일포(금강산)	삼일포(금강산)
상봉 가족수	○ 우리측 146명이 재북가족 226명 상봉 (방문단) * 우리측 동반가족 48명 ○ 북한 100명이 재남가족 438명 상봉 (상봉단)	○ 우리측 396명이 재북가족 97명 상봉 (상봉단) ○ 북한 216명이 재남가족 122명 상봉 (방문단)

2. 화상상봉

2006년 8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5·6차 특별화상상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최종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중단되었다가 2007년 「2.13 합의」 이후 속 개되었다. 제5차 화상상봉은 2007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남북 각각 60가족씩 총 120가족 819명(남한 495명, 북한 324명)이 상봉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3,242명의 생사확인고 이산가족들의 사진파일 1,088매를 교환하였다. 제5차 화상상봉은 상봉후보자 인선시 상봉자 60명 전원을 90대로 선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산가족에게 더 많은 상봉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화상상봉 첫날 한적 총재와 북적 위원장간 화상대화도 실시되었다.

이어 2007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제6차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 각각 40가족씩 총 80가족 550명(남 335명, 북 215명)이 상봉하였으며, 총 869매의 가족사진 파일을 교환하였다. 제6차 화상상봉에서는 남한의 8개 도시 12개 상봉실(제주 제외)과 북한 평양 고려호텔 10개 상봉실을 연결하여 1일 4회 매회 10가족 2시간씩 상봉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제7차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



화상상봉 장면

2007년도 화상상봉 현황

회차		제5차 화상상봉	제6차 화상상봉	제7차 화상상봉
일시		3.27~3.29	8.13~8.14	11.14~11.15
상봉 가족수	남한	60가족 495명	40가족 335명	39가족 291명
	북한	60가족 324명	40가족 215명	39가족 212명

각각 39가족씩 총 78가족 503명(남 291명, 북 212명)이 상봉하고, 총 576매의 가족사진 파일을 교환하였다.

3.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정부는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 때부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부터 면회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확대를 위한 면회소 설치가 합의되었다. 2003년 11월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는 면회소를 남한이 전담하여 건설·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식을 가졌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 2007년에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2.27~3.2)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말부터 면회소 건설공사가 재개되어 2007년 12월 7일 남북이 공동으로 남북면회사무소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12월 기준으로 면회소 건설은 약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산가족면회소 개요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관광특구지역내)
- 대지면적 : 50,000㎡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및 전망대(면회소동), 19,835㎡
- 구성 : 12층 면회소동, 3층 면회사무소동(2동), 파워플랜트(발전 시설)
 - 면회소동: 총 객실 206실(최대 1,000명 수용 가능)
 - 면회사무소동: 지상 3층, 2개동(남북)
 - * 1~2층 연회장 등, 3~4층 호텔식 객실(78), 5~12층 콘도식 객실(128)



금강산 남북면회사무소 준공식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국군포로는 6.25 전쟁 직후 정전협정을 통해 이루어진 포로교환시 귀환하지 못한 군인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실종된 국군을 41,971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포로교환시 귀환한 8,726명과 유가족 신고 등으로 전사 처리된 13,836명을 제외한 19,409명의 「6.25참전 실종자 명부」를 1997년 10월에 공개하였는데, 이 실종인원에는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의 미송환 국군포로의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많게는 5~8만명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한국전쟁의 전선의 범위, 성격 및 시간 경과 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산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통해 2007년 말 현재 약 56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4년 10월 조창호 중위가 최초로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환한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총 7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다.

납북자는 크게 6.25 전쟁 중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1955년 대성호 이후 총 3,796명이며, 이 중 3,310명(87%)이 납북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귀환하였다. 2000년 이후 전후 납북자 중 6명이 탈북 귀환하였다. 현재 미귀환자는 약 48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시 납북자는 조사시기와 조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 연감에 따르면 84,532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실향사민 등록사업에는 7,034명이 등록되어 있다.

국군포로 현황

(단위: 명)

구 분	생 존	사 망	행방불명	합계
국군포로	560	910	300	1,770

※ 참여정부 기간중('03~현재) 귀환 인원 : 국군포로 41명 / 국군포로의 가족 92명

전후 납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어 부	KAL기	군·경	기 타	계
납북자	3,696	50	24	26	3,796
귀환자	3,269	39	—	8	3,316
억류자	427	11	24	18	480

전시 납북자 관련 통계

구분	출처	추정인원
서울시 피해자 명단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 연감(1950)	2,438명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 연감(1952)	82,959명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 연감(1953)	84,532명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1954)	17,940명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1956)	7,034명

1. 남북협의를 통한 해결노력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남북 당국간 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인도적·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시비를 지양하고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에 우선 주력하였다.

정부는 2000년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및 적십자회담 등 각종 대화 채널을 통해 약 25차례에 걸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총 13차례의 협의를 도출하였다. 2007년에도 정상회담(10.2~4), 총리회담(11.14~16), 제20차 장관급회담(2.27~3.2), 제21차 장관급회담(5.29~6.1), 제8차 적십자회

담(4.13), 제9차 적십자회담(11.28~11.30) 등 총 6차례의 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4차례의 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의 미온적 태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제8차 적십자회담시 동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적십자 채널과는 별도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논의를 위한 별도채널 구축방안, 북한의 협조에 따른 경제적 보상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설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 이산가족 틀 내에서의 접근만을 고집하여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시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였으나 남북의 근본적인 입장차이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남북회담시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합의 현황

회 담	합의사항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2002.9)	3.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2002.10)	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한다.
제2차 적십자실무접촉 (2002.12)	면회소 규모,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및 서신교환 확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기 접촉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2003.1)	3.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문제와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문제를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해 나간다.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2005.6)	3. 제6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2005.9)	4. ②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2005.12)	5. ① 쌍방은 2006년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2006.2)	4.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2006.4)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회 담	합의사항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2007.2)	4. ③ 쌍방은 제8차 적십자회담을 4월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2007.4)	4. 남과 북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 (2007.11)	5.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2007.11)	3.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 제정

2006년 1월 정부는 과거 남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률안은 2006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10월 20일 정기국회에 정부법률안으로 제출되었고,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법률 제 8393호로 공포되었다.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 주요내용

- 국가의 책무로 납북자 생사확인, 송환, 가족상봉 및 귀환납북자 재정착 의무 확인 (제4조)
- 3년 이상 납북자의 가족: 피해위로금 지급(제9조)
- 3년 이상 납북자 중 귀환자 : 정착금 등 지급(제8조)
-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 등 피해자: 보상금(제10조) 및 의료지원금(제11조) 지급
- 국무총리 산하 「남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법률안 제정 및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률 적용대상,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수준,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문제 등이 쟁점이 되었다. 법률 적용대상으로 한국전쟁 중에 납북된 인사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전후 납북자만을 대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후 납북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납자가 1년 6개월 이내에 귀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북된 후 3년 이상 돌아오지 못한 자로 한정하였다. 입법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소재와 위로금의 수준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나, 납북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작위·부작위를 전제한 보상이나 배상은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 장기간 납북된 데 대한 위로차원의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로금 수준은 유사법률과의 형평성과 위로금의 성격, 납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납북자 가족단체는 동 단체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이해 당사자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국회 심의과정에서 납북자 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다.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령은 2007년 10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3일에 대통령령 20333호로 공포되었다. 시행령에서 귀환납북자 정착금은 월 최저 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국내 귀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착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상이자에 대해서는 호프만식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상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와 「납북피해자지원단」이 구성되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통일연구원 등 기관의 추천에 의해 8명이 선정되었다.



전후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남북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남북피해자의 해당여부, 피해위로금·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실태조사 등 남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남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 남북자 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보좌할 「남북피해자지원단」도 11월 5일 개소함으로써 법률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지원단 사무실 개소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총 70건의 피해위로금 신청이 접수되었다.

제3절 인도적 지원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의 지원 여력과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실시한다는 입장으로, 2007년에는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포함하여 총 4,728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주민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비료 30만톤과 쌀 차관 40만톤을 비롯하여 8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대한 긴급구호 및 복구용 자재장비를 지원하였다. 그 밖에도 성홍열, 산림병해충 방제, 구제역 방제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5년에 북한 영유아에 대한 특별지원 장기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와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100억원 내외 규모의 영유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 한국제이티에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국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5개 컨소시엄의 영유아지원사업에 총 10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 인도적 대북지원 분야에서의 큰 특징은 민간차원의 교류가 당국차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12.4~6, 서울)의 합의에 따라 12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개성에서 제1차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도병원 현대화, 전염병 통제 등 5개항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보건당국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환경 분야에서는 백두산 화산활동 공동연구, 대기오염 피해감소를 위한 공동협력, 한반도 생물지(生物誌) 사업 등 3개항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산림녹화 분야에서는 시범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 2개항에 합의하여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당국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 비료지원

정부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1999년에 대북 비료지원을 시작한 이래, 정부차원에서 매년 20~30만톤씩 비료를 지원하여, 2007년까지 총 255.5만톤, 7,995억원 상당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27~3.2)에서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3월 7일 북한은 장재언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30만톤의 비료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3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료 30만톤, 956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료 수송은 3월 27일부터 시작되어 총 39항차를 끝으로 6월 23일에 완료되었다. 항구별로는 남포(160,000톤), 해주(58,000톤), 원산(15,000톤), 홍남(37,000톤), 청진(30,000톤) 등 5개항으로 전달하였다. 비료전달 과정에서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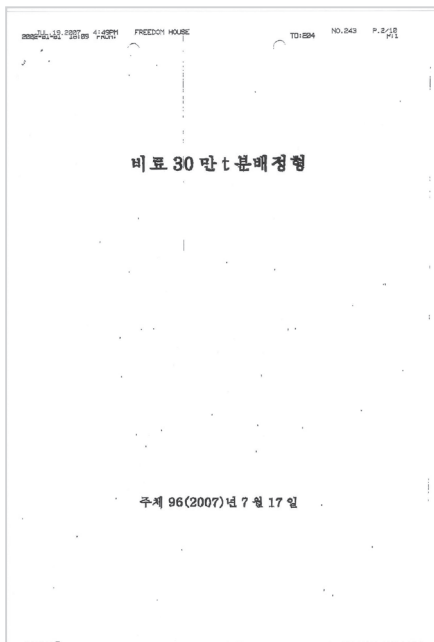
일부·한적·유관기관·국회·장학사 등 총 156명이 인도인원으로 참여하였다.

북한은 1998년에 체결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도·시·군(구역) 단위의 비료 분배내역을 7월 17일에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대북 비료지원 현황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규모(만톤)	15.5	30	20	30	30	30	35	35	30	255.5
금액(억원)	462	944	638	832	811	940	1,207	1,200	961	7,995

북한이 보내온 비료분배 정형 통보서



구분	비료명	단위	수량	비율	비율비율
비료	비료	톤	20	20	20
	비료	톤	1,200	16	1,20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비료	톤	200	20	20

2. 식량차관

정부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위해 1995년에 쌀 15만톤을 무상 지원한 이래, 2000년부터 식량 차관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4월 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국내산 15만톤, 외국산 25만톤의 쌀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총 40만톤의 쌀 수송은 6월 30일 군산-남포간 제1항차 수송선이 출항한 이후,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육로를 통해 개성 3만톤, 고성 2만톤 등 총 5만톤이 제공되었고, 해로를 통한 전달은 12월 5일 완료되었다. 북한 도착항은 남포항(187,887톤), 해주항(31,500톤), 청진항(37,613톤), 흥남항(44,700톤), 원산항(48,300톤) 등 총 5개항을 통해 35만톤이 지원되었다. 지원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총 293명이 식량 인도인원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2007년도 식량차관 제공시 남북간 합의에 따라 매 10만톤 지원마다 분배현장 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개성, 남포, 해주, 함흥 등 쌀 차관 전달지역 인근에 위치한 총 20곳의 식량공급소에 각 5명씩 총 100명의 남한 인원이 방문하여 북한 주민들이 쌀을 배급받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지원식량 대북인도 현장

대북 식량차관 제공 현황

연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7	계
지원실적	외국산쌀 30만톤 중국산옥수수 20만톤	국내산쌀 40만톤	국내산쌀 40만톤	국내산쌀 10만톤 외국산쌀 30만톤	국내산쌀 40만톤 외국산쌀 10만톤	국내산쌀 15톤 외국산쌀 25만톤	쌀(국내외) 240만톤 옥수수(중국산) 20만톤
남북협력기금	1,057억원	1,510억원	1,510억원	1,359억원	1,787억원	1,649억원 (의결기준)	8,872억원
지원기간	'00.10~'01.3	'02.9~'03.1	'03.7~'12	'04.7~'05.2	'05.7~'06.2	'07.6~'12	

3. 수해 등 긴급구호지원

가. 수해지원

2007년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평양 580mm, 평남 북창 796mm, 황북 서흥 769mm 등 북한의 중남부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사망·실종이 600여 명에 이르고 주택손상 24만 세대, 농경지 침수 20만 여 정보, 이재민이 100만 여 명에 이르는 등 1995년 대홍수에 버금가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이 같은 피해사실을 조선중앙TV 방송을 통해 상세히 보도(8.25)하면서 UN 인도지원조정국(OCHA)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정부는 수해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8월 14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긴급구호방침을 결정하고, 북한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라면, 모포, 생수, 취사도구, 의약품 등 총 75억원 상당의 긴급구호품을 육로로 수송하여 개성에서 전달하였다. 한편 북한은 8월 21일에 피치, 디젤유 등과 도로건설용 중장비, 살림집 건설용 시멘트, 강재와 운송수단 등 복구자재를 요청해왔다. 정부는 총 374억원 규모(운송비 100억원 별도)의 수해복구용 자재·장비 지원을 결정하고, 건설장비 20대, 트럭 80대, 철근 5천 톤, 시멘트 10만톤, 피치 2만톤, 경유 500톤을 9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육

로와 해로를 통해 전달하였다.

UN 인도지원조정국은 북한 수재지원을 위해 미화 1,400만 달러의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참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UN 인도지원조정국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158억원 상당의 자체지원을 결정하고 정부의 참여를 요청해옴에 따라 30억원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등 총 598억원 규모의 수재지원을 하였다.

나. 기타 긴급지원

대북지원 중 긴급구호 형태의 지원은 2004년 용천재해를 시작으로, 2005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과 수해지원, 2006년 수해지원 등 상황발생시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다. 2007년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성홍열, 구제역, 산림병해충 방제지원과 수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이 처한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처하였다.

2007년 초 정부는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국제기구(FAO, OIE)를 통해 확인하고 3월 9일 구제역 방역 지원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인 구제역 발생경위 및 피해상황을 전달하면서 구제역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소독약, 소혈청, 알부민, 분무기, 멸균기 등 26억원 상당의 약품과 장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 산림지역에 솔나방, 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 등 산림병해충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5월 8일 개성에서 방제관련 대북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이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분무기, 천공기 등 18억원 상당의 약품과 장비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특히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의 경우,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양시 중화군 지역에서 남북공동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북한지역의 산림병해충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2006년 10월 중순부터 양강도 지역에서 발생한 성홍열이 2007년에 접어들면서 강원, 함북, 평안도 등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007년 1월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3개 민간단체가 전염병 치료제를 지원하였으나 지원양이 부족하다

고 판단하고, 1월 22일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하여 4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지원하였다. 치료제 지원규모는 북한의 10세 미만 어린이 약 400만 명 중 약 10%의 유병율을 추정하여 결정하였다.

4.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북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이 미래의 한반도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2005년에 국제기구, 민간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 영유아의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2006년 민간단체로 구성된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민간차원에서 북한과 사업협의를 시작하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에 한국제이티에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이 주관하는 5개 컨소시엄(총 18개 단체 참여)이 북한과 영유아 지원사업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추진한 남포시 산원 및 소아병동, 대안군 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남포시·대안군의 영유아와 임산부 영양개선 사업 및 어린이 영양생산시설 지원사업, 함경북도 회령시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사업 등에 총 105억원을 지원하였다.

제1차 남북보건의로·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12.20~21, 개성)에서 당국차원의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도 병원 현대화, 전염병 통제 등이 합의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차원의 지원과 함께 당국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5. 민간의 지원활동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

다. 2006년 하반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민간단체의 물품지원이나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모니터링 인원의 방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서도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액은 총 7,171억원이며, 이 중 1,757억원(25%, 국제적십자사 경유분 포함)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414억원(75%)은 독자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2007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0억원, 민간단체 독자창구를 통해 880억원 등 총 920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 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 중 지원의 시급성, 북한 수해대상과 분배지역,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가. 개별사업

개별사업은 한 단체가 추진하는 단일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년 7개 단체에 33.8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42개 단체에 117억원을 지원하는 등 7년간에 걸쳐 총 569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개별사업의 지원분야 및 품목도 다른 형태의 대북지원과 동일하게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씨감자, 젖소 농장, 젖염소 농장, 조림사업 등에 지원되었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병원 및 제약공장 시설·기자재,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에 지원되었다.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육아원이나 소학교 어린이 급식(빵, 국수, 콩우유 등), 공책 공장 등에 지원되었다. 이러한 지원에 수반하여 재배농법 전수, 공동 의료시설, 제약공장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전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교류도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북한에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수송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에 11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 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제주도산 당근 4,100톤, 감귤 8,260톤의 수송비로 24억 6,3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민간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등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 등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직항로를 통한 민간단체 기증자의 현장 확인 형식의 대규모 방북도 추진되면서 2007년에는 총 9,898명이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방북하였다.

나. 합동사업

2004년 용천재해와 대북지원 10년의 경험을 통해 개별단체나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북한의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정부의 재원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경험을 결합한 합동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2007년 합동사업 현황

연도	사업내용	지원액(의결기준)
2005년	① 모자보건 복지사업 ② 보건의료 체계 개선사업 ③ 축산사료 자급사업 ④ 농업·보건용수 개발사업 ⑤ 주거환경 개선사업	50억원
2006년	① 강남군 종합복지모델 개발사업(신규) ② 보건의료 체계 개선사업(계속) ③ 북도직파 농업협력사업(신규) ④ 보건·식수환경 개선사업(계속) ⑤ 주거환경 개선사업(계속)	50억원
2007년	① 강남군 종합복지모델 개발사업(계속) ② 보건의료 체계 개선사업(계속) ③ 농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계속)	37,6억원

다. 정책사업

기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민간단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정부가 심사하여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거나, 전문가 추천 등을 받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분류하고, 2007년에 처음으로 4개 사업에 33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정책사업으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해 봄철 북한의 수요에 맞추어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16억원, 2006년에는 7억원, 2007년에는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산림녹화 시범사업은 북한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민화협 등 3개 민간단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겨레의 숲」을 통해 13억원을 지원하여 양묘장 조성 및 조림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필수약품 원료지원은 이미 남한이 지원한 제약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가 부족하여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10억원을 지원하였다.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북한 의료인력 교육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6.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1995년 이래 다양한 국제기구 경로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월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2007년 초부터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다시 대북지원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

황변화에 따라 WFP가 우리 정부에 대북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2007년에 옥수수, 밀, 밀가루 등 약 3만 2,000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WFP에 미화 2,000만 달러(190억원)를 지원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정부는 2001년부터 말라리아 방제를 위해 매년 방제 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해왔고, 2007년에도 미화 138만 달러(13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북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워크숍 등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를 통해 어린이 영양식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식수·위생개선을 위해 미화 315만 달러(29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북한의 취약계층인 산모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해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2006년 미화 1,068만 달러(106억원), 2007년 미화 938만 달러(8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후속 3개년 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빈국 아동들에게 만연하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는 2007년부터 북한 아동에 만연한 뇌수막염, 일본뇌염 등의 퇴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2007년에 처음으로 동 연구소를 통해 5억원 상당의 뇌염백신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내역

① WFP(식량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불(16억원)
1997	혼합곡물 18,241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2,053만불(185억원)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불(154억원)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불(22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불(234억원)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불(191억원)

연도	내역	지원액
2004	옥수수 10만톤	2,400만불(264억원)
2007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2,000만불(190억원)
계	543,950톤	12,836만불(1,457억원)

② WHO(말라리아, 영유아, 긴급 의료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불(6.3억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불(6억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불(8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불(8억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87만불(10억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불(9억원)
2006	말라리아 방역(120만불), 영유아지원(1,068만불)	1,188만불(124.7억원)
2007	말라리아 방역	138만불(13억원)
	영유아지원(938만불), 홍역(105만불) 지원	1,043만불(99억원)
계		2,778만불(284억원)

③ UNICEF(취약계층, 영유아)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분유 203톤	100만불(8억원)
1997	ORS공장, 분유781톤	394만불(35.4억원)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불(6억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12억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10억원)
2006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230만불(23억원)
2007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315만불(29억원)
계		1,289만불(123.4억원)

④ 기타 국제기구(기상자재, 농업 등)

연도	국제기구	내역	지원액
1996	WMO	기상자재	5만불(0.4억원)
1997	UNDP	지원	120만불(15억원)
	FAO	지원	30만불(3.8억원)
2007	IVI	백신, 의료교육	50만불(4.7억원)
계			205만불(23.9억원)

제4절 새터민 정착지원

새터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새터민 총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07년 12월까지 총 12,254명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7년에는 약 78%를 상회하고 있다.

새터민 입국 현황

(단위: 명)

구분	'89이전	'90~'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남성	564	80	35	43	56	53	90	180	294	514	468	625	422	510	569	4,503
여성	43	6	6	13	30	18	58	132	289	625	813	1,269	961	1,509	1,979	7,751
합계	607	86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2,019	2,548	12,254

※ 새터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새터민 1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는 새터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으며 특히 2007년에는 자립·자활의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2007년에는 새터민 지원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종합대책은 새터민의 자립유도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감액하는 대신 취업장려금을 확대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특례제도를 개선하여 생활능력세대에 대해 생계급여 조건부과 면제기간 및 특례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의 취업보호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새터민 모범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부 우선구매 신청요건을 강화하는 등 새터민의 고용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정착도우미제 도입, 새터민 채용박람회 개최 및 새터민 일자리 창출협약 등 새터민의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 9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발주하여 새터민 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84%의 새터민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새터민 지원정책은 남성·성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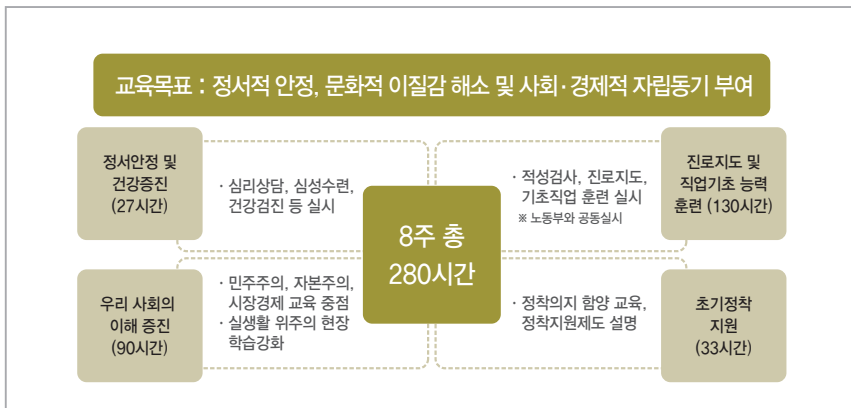
독세대의 소규모 입국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해외 장기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및 200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과 가족동반 새터민의 입국 증가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대외적으로 해외 장기체류 탈북자의 조기 국내입국 추진 및 체류국 수용시설의 체류여건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의약품 지원 등 직·간접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1. 사회적응교육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은 사회적응 교육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주거알선, 취적(就籍) 등 우리사회 편입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착지원시설로서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8주 동안 하나원에서 집중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지식을 갖추게 된다. 하나원의 주된 교육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등 사회제도와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과 정서안정 프로그램, 원활한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능력 훈련 등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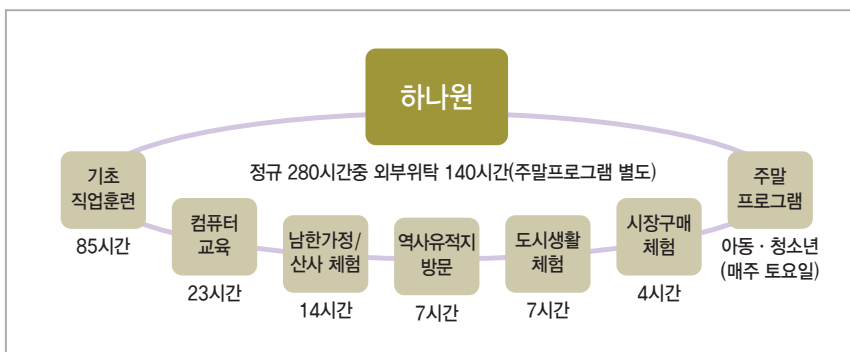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의 주요 내용은 남북간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 남한가정 체험, 산사 체험, 도시생활 체험, 시장구매 체험, 역사유적 탐방 등의 현장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탈북 및 제3국 도피·은신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인 불안과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원 내의 하나의원에서는 현재 5명의 공중보건과의와 3명의 간호인력이 새터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2006년 5월 18일 「통일부-노동부간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하나원에서 실시하던 직업교육을 기술교육 전문기관인 폴리텍대학에 위탁 실시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에서는 새터민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총 108시간(3주)의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컴퓨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5월 위탁교육이 시작된 이래 2007년 12월 31일까지 1,933명의 새터민이 폴리텍대학을 수료하였다.

이와 함께 하나원에서는 전문 직업상담사에 의한 ‘적성검사와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새터민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하나원에서는 새터민들이 하나원에 있는 동안 일반국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남한생활에 대한 체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탁 교육시간을 50% 이상 배정하고 있다.

하나원은 남·여 분리교육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원에서는 그 수가 적은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본원과 분원



을 합치면 4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2,300명을 교육할 수 있으며, 1999년 7월 하나원 개원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총 10,333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였다.

정부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국내 입국 새터민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하나원 증축을 추진 중에 있다. 2차 증축공사는 2007년 10월 15일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축이 완료되면 본원 시설만으로도 지금의 2배 규모로 동시 600명, 연간 3,600명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새터민의 중국 여행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종전 하나원 소재 면사무소에서 일괄 부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2007년 5월부터는 이들의 거주지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정착지원

정부의 새터민 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맥락 하에서 새터민에 대한 보호와 우리사회 내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새터민들은 거주지에서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이른바 ‘수혜적인 보호정착 지원’을 새터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았으나, 새터민 증가와 더불어 새터민 정착지원의 방향을 ‘자립 자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과 2006년에 새터민 정착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07년 1월 26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07년 6월 28일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가. 초기 정착금 지급

정착금 지급은 새터민이 사회에 나온 뒤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터민 모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새터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2007년 현재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새터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되어 있다. 정착기본금은 새터민이라면 누구나 수혜자가 되지만 그 금액은 1인 가족의 경우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하여 1,900만원으로 2004년 이전 3,590만원과 비교하여 53% 수준으로 낮아졌다.

2007년 정착기본금 지급 기준

(단위:만원)

가족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
1인	300	300	1,300	1,900
2인	400	700	1,700	2,800
3인	500	1,000	1,700	3,200
4인	600	1,300	1,700	3,600
5인	700	1,600	2,000	4,300
6인	800	1,900	2,000	4,700
7인 이상	900	2,200	2,000	5,100

※ 분할 지급금은 매분기별로 1년 동안 지급

그러나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직장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동일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정착기본금이 줄어든 대신 취업장려금의 지급액 수 총액을 9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새터민 한 사람이 정착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140만원으로, 이 금액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착금 수혜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2007년에는 총 583명에게 10억여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2006년에 117명 대상 2억 3천여 만원이 지급된 것에 비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07년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 이하	-	미지급
	6~12개월	개월 수×20만원	
	1년 과정, 폴리텍대학, 우선선정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수혜자	200	
취업 장려금	1년차	450	
	2년차	500	
	3년차	550	
총액(최고액) 2,140만원			

※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취업장려금 증액

2007년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만원)

년도	종류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총액
2007	지급액	45,800	43,400	12,150	101,350
	인 원	338명	217명	28명	583명

정착가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장기 질병이 있는 새터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연령 가산금은 보호결정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새터민에게 지급하며, 장애 가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과 2-3급, 4-5급에 차등 지급한다. 장기치료 가산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 일부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새터민이 수혜대상이다. 결혼가정 아동보호 가산금은 보호 결정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그 수혜자가 된다.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2007년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만원)
연령 가산금	60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 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 수×80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

나. 주택 지원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후 사회로 배출된 새터민에게는 대한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알선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새터민이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며 이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주거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한다.

주거 지원금은 1인 세대의 경우에는 1,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2~4인 세대의 경우에는 1,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지만 5인 이상 세대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주거 지원금 한도액보다 실제 임대보증금이 적은 금액일 경우, 실제 임대보증금만 지원하고 잔액은 5년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거주자인 새터민이 임대주택을 변경할 때 차액이 발생하면 5년 이내에도 그 잔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도 한다.

다. 취업 지원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을 알선하며 새터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우선 직업훈련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훈련기간 중에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새터민이 취업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전문직업 훈련을 받기 이전 단계에서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894명이 직업훈련을 시작하였으며 이중 398명이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노동부 산하 전국의 53개소에 달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전문취업상담 공무원을 새터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들은 새터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과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는 별도로 새터민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상으로는 새터민 취업지원사이버센터(www.sjobcc.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으로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새터민 채용한마당」(11.20)을 KBS 88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정부는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새터민이 취업한 뒤 1년이 될 때까지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1년 이후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3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새터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만원)

	'01	'02	'03	'04	'05	'06	'07
업체수	226	274	240	218	323	378	564
인 원	251	296	310	269	446	497	728
총지급액	99,965	113,025	109,416	94,461	142,628	140,200	224,033

하나원은 2007년 10월 남북평화재단 및 대우차판매(주)와 「새터민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원을 수료한 남성 새터민 중 자동차 운전면허나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새터민 10여 명이 대우차판매(주) 정비 사업소에 채용되었다.

라. 교육 지원

새터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해당 대학이 정하는 입학절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하거나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4년 이전에는 만 35세 미만의 새터민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한 시점과 관계없이 국립대학은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사립대학은 국가와 학교가 각각 2분의 1을 분담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새터민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 35세 미만인 사람이 일반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할 경우,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등 대학진학 자격을 획득한 지 5년 이내에 진학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반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 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할 때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에 입학하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만 35세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도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비지원을 받으면서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 진학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가족동반으로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는 새터민 청소년들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이후 2007년 10월까지 입국한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새터민 청소년들은 모두 1,511명이

며, 이들은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학제의 차이, 긴 탈북기간 동안 수업 결손 등으로 남한 학교에 곧바로 편입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하기 이전의 디딤돌학교로서 탈북청소년특성화학교인 한겨레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한겨레학교는 기숙형 중·고교 과정 통합학교로 2006년 3월에 개교하여 시범학급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2개월~2년 기간 동안 사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들이 제도권 교육과정으로 편입했을 때 적응력을 높이고, 무연고 청소년을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면서 다양한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들을 위해서 새터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6개 지역 8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전·현직 교원 15명을 교육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돕고 있으며,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 사회보장 지원

새터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새터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의료보호가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새터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새터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한다. 생계급여의 현금 지급액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007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최고액)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1인 세대	37만원	4인 세대	103만원
2인 세대	62만원	5인 세대	120만원
3인 세대	83만원	6인 세대	137만원

바. 거주지 지원

새터민이 하나원을 떠나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고 나면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각 지역협의회의 도움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착도우미 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새터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착도우미는 자원봉사 경력 10년 이상의 유경험자 중에서 선정하는데 이들은 새터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1년에 걸쳐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도와주는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 정착도우미는 새터민 1세대 당 2명을 지정하게 되는데 2007년 7월 현재 1,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에는 앞에서 언급한 취업보호 담당관 외에 거주지보호 담당관과 신변보호 담당관이 있다. 거주지보호 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새터민의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209명의 거주지보호 담당관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 담당관은 새터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며 새터민의 신변을 보

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700여 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 담당관의 임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새터민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적응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단체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고령자와 여성 새터민을 위한 시범사업, 새터민 친목단체 지원 등에 총 4억 8천여 만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터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실태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체적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7년 현재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6개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5절 북한인권문제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의 인권실태 파악 및 여론조성,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탈북자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통일부 내에서도 정보분석본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실태를 추적하고 있으며, 통일연구원과 협력하여 「북한인권백서」(국·영문)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또한 여러 민간단체가 발간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간행물의 배포도 지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의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 유엔 등 국제기구 관

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민간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 및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나 책자발간 등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이 되지 않도록 주재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정부는 식량, 비료, 의료품, 긴급구호 물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먹고 사는 권리’(right to food and nutrition) 등 북한주민의 경제·사회적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 하에,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어린이·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제기구(WHO, UNICEF 등)와 협력하여 건강관리·영양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투표에 불참하였고, 제60차·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와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기권하였다.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 직전 정부는 설명문(Explanation of Vote)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고려해 기권할 것이라는 점과, 기권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대화에 기초한 포용(engagement)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개선과 그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또다시 기권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확신 하에 남북한 협력과 대화 지속, 인도적 지원,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이행할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개최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식량권을 위시한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는 동시에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7년 제62차 유엔총회에서는 정부는 기권을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및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의 입장

UN 인권위원회	UN 인권위원회			UN 총회		
	2003년 (59차)	2004년 (60차)	2005년 (61차)	2005년 (60차)	2006년 (61차)	2007년 (62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28:10:14	29:8:16	20:9:14	84:22:62	91:21:60	97:23:60
우리 입장	불참	기권	기권	기권	찬성	기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비딧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2007년 제62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한국전쟁을 포함한 남북한간의 역사적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2006년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은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나 2007년 핵불능화 합의 등 6자회담 진전으로 인해 고무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상기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생존권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자유권의 제약을 비판하고 북한에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일부 NGO들이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지도자를 제소하려는 움직임

직임을 소개하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였다.

동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 2004년과 2005년의 형법 개정 등 몇 가지의 중요한 법 개정작업과 대중용 법전 발행 등을 통해 인권상황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07년 제62차 UN총회 제출 문타폰 보고서 요약

- 북한은 식량과 영양에 관한 생존권, 자유권, 개인의 안전과 인도적 처우, 사법정의, 망명권과 난민보호, 취약계층 보호, 국가의 인권보호 책임 등에서 여전히 심각한 상태
- 2006년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은 이러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나 2007년은 핵불능화 합의 등 6자회담 진전으로 인해 고무적 상황
- 북한은 최근 들어 2004년과 2005년의 형법 개정 등 몇 가지의 중요한 개정작업과 법령 대중판의 발행 등을 통해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시현
- 북한은 북한이 가입한 각종 인권조약 의무 및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 북한은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